

‘황우석 생명공학 혁명’ 과 生命윤리



글·김정수
중앙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올 여름 한국 영화계엔 작은 이변이 있었다.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할리우드 대작 ‘아일랜드’의 흥행 선전이다. 인간 복제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개봉 후 한달 이상 박스오피스 수위를 점하며 올해 개봉된 외국 영화 가운데 ‘우주전쟁’을 제치고 최단 기간 내에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도 세웠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흥행에 참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거의 유일하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나라가 한국이었다. 왜? 사람들은 ‘황우석 효과’라고들 했다.

이 영화 제작진은 개봉 전 “처음 영화를 구상할 때는 2060년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소식에 설정을 바꾸게 됐다”고 해서 한국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황 교수의 연구 성과로 인해 인간 복제가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영화의 배경을 40여년 앞당긴 2019년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7월 21일 이 영화가 개봉되고 보름쯤 지난 8월 4일, 황 교수는 또 한번 엄청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개 복제에 성공한 것이다. 그 뉴스를 접하며 황 교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괜히 우쭐한 느낌을 가졌던 건 아마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흥행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인간 복제라는 이 영화의 소재에 더 관심을 갖고 리얼리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영화가 관객들에게 과연 인간 복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겨줬을까? 개 복제에 이어 영장류 복제가 현실화되고, 나아가 인간 복제로 인해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암울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을까? 아마 철저한 할리우드식 액션 오락물인 그 영화에서 그것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쉽다. 지난해 봄에 이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열광시킨 '황우석 신드롬'에 대해, 영화라는 대중문화의 힘이 생명윤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까지 이끌어내 줄 수 있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최근 취재와 관련해 비디오로 본 공상과학영화 '가타카' (1998년 개봉작)는 보다 직설적이었다. 배우 에단 호크와 우마 서먼 주연의 그 영화는 유전자가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新)계급사회의 문제를 '아일랜드'와는 달리 정면으로 다루어 긴 여운을 주었다.

주인공 빈센트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경계 질병 60% 가능, 우울증 42% 가능, 집중력 장애 89% 가능, 심장질환 99% 가능, 조기사망 가능, 예상수명 30.2세"라는 '선고'를 받는다. 여러 가지 질환 가능성 때문에 보험도 들 수 없는 빈센트는 유치원에서조차 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부당한 채 자란다.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가졌지만 성인이 된 뒤 유전자 검사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집을 나간다. 우주항공회사인 가타카의 청소부로 일하던 빈센트는 불의의 사고로 자포자기해 자신의 우성 유전자를 팔게 된 유진이란 사람과 연결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다. 얼굴과 키는 물론이고 피와 타액, 모근 하나까지 철저히 속이는 과정을 통해 가타카에서 최고의 항공사가 된 그는 결국 꿈에도 바라던 토성행 우주선에 오르게 된다.

유전자 계급사회에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이는 해피엔딩으로 보기에선 뒷맛이 영 씁쓸한 영화였다. 국가와 기업들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해 사회적으로 차별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복제 역시 영화에서처럼 머지 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지 모른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유전자 계급사회나 인간 복제 등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줄기세포에 관한 취재를 하면서 직접 만나본 황 교수의 순수한 뜻을 믿는다. 또 생명윤리의 한쪽 면만을 내세워 척수마비 환자와 난치병 환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생각은 없다. 황 교수가 곧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며, 줄기세포나 황 교수와 관련된 작은 뉴스에도 흥분하던 그 환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 생명공학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파생시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하다. 사람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

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많은 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생길 사회적 갈등 등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까지 일본 히로시마 핵무기 투하 사건을 제외하고 핵무기에 의한 결정적인 파국은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핵무기의 위험성 역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들이 스스로 핵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명공학도 마찬가지다. 황 교수의 성과 등으로 세계 생명공학계의 선두로 나선 한국이야말로 이런 기술을 적절히 통제할 만한 사상을 정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작업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선에서 그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활용할 의료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 자체도 많지 않지만, 그 논의에서조차 정작 이 새로운 기술들을 환자에게 직접 적용시킬 의료인들은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그래선 안된다. 올해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아직 너무나 허술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만 모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물론이고, 유전자 검사나 개인의 유전 정보가 남용됨으로써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 동물의 복제 장기를 인간이 이용하게 될 때의 문제, 인간 복제가 현실화될 때의 문제 등에 대해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의료인들이 먼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가 봐온 의사나 병원들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 최근 몇 년째 성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를 예로 들어보자. 일부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동의서 받는 일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고, 일부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생명윤리법을 악용해 영리 수단으로 삼는 의료기관들도 있다. 정도 관리와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력해 ‘수수료’를 받고 유전자 검사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 것이다. ‘허가기관’이 아니라 복지부 ‘신고기관’에 불과한 유전자 검사기관들은 그런 병원들과의 제휴를 내세움으로써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에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은 유전자 검사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실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인이자라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생명공학의 성과에 대해 일반인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기술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좀더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HA**